이재명 "추경, 설 전 30조원 목표"

신년회견…"1인당 최소 100만원 지원해야"

"대도약 시대…국력 세계 5위·소득 5만달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크기는 하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 승수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며 자신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텐데 이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채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집값 하락 시 대책을 묻는 말에는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에는 일정 선을 기준점을 두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신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다.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외교 갈등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어떤 분이 모호함을 피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던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며 "가장 비주체적이고 굴종적인 자세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이 후보는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4대 위기로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문제·기술경쟁 ▲글로벌 패권경쟁을 꼽으면서 "유능한 추진력과 실용적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력 세계 5위(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최준영 부사장과 유철희 공장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구 개편 '호소' 지방자치단체 군수 9명이 4일 국회를 방문,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당가입 연령' 개정안 논의

'출마 18세' 후속 조치

국회는 4일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재외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재외투표소 투표 시간 조정, 외국인의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앞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유통 경로로 여겨지면서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바 있다.

지구당 설치 법안과 관련해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사당화 방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인력 확대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이날과 5일 회의를 거쳐 이들 법안 중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에 대해서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종인과 결별?…오늘 '새판짜기' 공개

국힘 선대위 갈등 일촉즉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선대위 개편을 놓고 이틀째 장고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종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며 핵심 참모들과 선대위 쇄신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전체가 그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윤 후보는 5일께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선대위 운영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윤 후보의 김 위원장 배제설로 당 안팎이 술렁거리는 등 양측간 갈등이 일촉즉발인 모양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라는 게 10분마다 바뀌는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지만, 내부에선 윤 후보가 이미 선대위 개편 방향의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현시점에선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을 자르고 '단기필마'를 전격 선언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도 대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폐기하고, 일단 눈앞의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중심의 조직을 새로 꾸리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 대신 윤 후보가 직접 주도권을 쥐고 앞서 사의를 표명한 기존 선대위 지도부 일부를 재신임하는 방식으로 재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김 위원장이 '울산 회동' 직후 선대위에 합류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능력 발휘를 못 한 것 아니냐는 현실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전날 지지율 하락을 자신이 아닌 윤 후보 탓으로 돌리고 리더십에 손상을 입히는 언행을 서슴지 않은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내통해 윤 후보가 가장 곤경에 처했을 때 치고 나왔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다른 인사는 "윤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아직 최종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 후보와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윤 후보가 김 위원장과 함께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김 위원장과 끝내 결별할 경우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판단도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책임 정부…소상공인 보상 최선"

새해 첫 회의…"중차대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4일 "우리 정부의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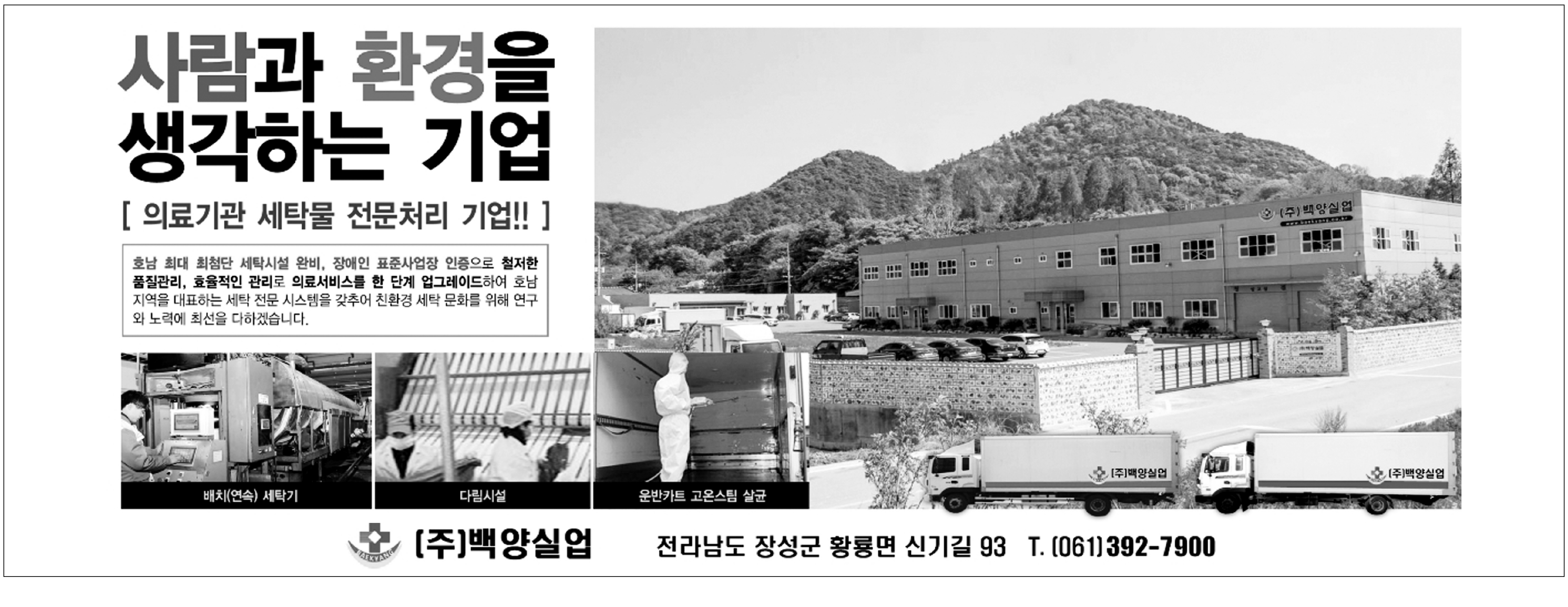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힌 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노력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당에서 '신년추경' 편성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현재 내놓은 보상책의 경우 이미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추경 편성 여부는 향후 국회가 추가적인 보상안을 논의해 온 후에야 검토할 문제라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무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